'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유명무실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도로변 공공소화전 앞에 차량이 불법 주·정차 돼 있다. /김생훈 기자

올해 단속 2만8천건…작년보다 대폭 늘어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소방활동에도 큰 지장

교통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줄지 어선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지자체의 관리·단속 강화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 터 7월까지 집계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23만7,351건이다.

이 중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단속된 건수는 2만8,070건으로 전체의 11.8% 수준이다. 구역별로는 ▲소방 시설(소화전) 5m 이내 2,641건 ▲교 차로 모퉁이 5m 이내 5,297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1,441건 ▲횡단보도 위 1만8,691건 등이다.

문제는 단속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41만4,899건이었다. 이 중 4대 불법 주 정차 금지구역 단속 건수는 3만1,176 건 전체의 7.5%로, 비율로 봐도 절반 이상인 4.3%가량이 늘어났다. 단속 건 수 역시 7월까지 건수임에도 지난해의 90% 수준으로 불과 3,000여 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내 3,196건 ▲교차로 모퉁이 5m 이 내 7,344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1,590건 ▲횡단보도위 1만9,046건 등 으로 모두 지난해 단속 건수에 근접했 다. 8월까지 합하면 지난해 건수를 넘 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2019년 4월 17일 시행된 주민신고제와, 같은 해 8월 1일 소방시 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태료 를 기존(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보다 4만 원 올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 법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단속 건수가 줄 어들기는 커녕 늘어나는 추세다.

일선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관리·단 속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4 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범위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도 많다. 보행자 와 운전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 소방관들은 안전 위험을 경

시민 김모씨(42)는 "좁은 도로의 교 차로 근처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좌회 전 · 우회전 시 접촉사고가 나지는 않을 까 노심초사한다"면서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이 주차돼 구역별로도▲소방시설(소화전) 5m 주위 시야를 가리는 등 사고 위험이 커

항상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구에서 활동하는 한 소방관은 "불 법 주정차 때문에 덩치가 큰 소방 차량 이 진입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화전 근처 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간을 뺏겨 더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

일각에서는 단순반복적인 단속과 안 전신문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대전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구간 공간정보 DB 구축 사 업'을 추진해 내년 1월 서비스할 예정 이다. DB 구축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구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 관련 민 원 발생 시 정확한 단속위치를 공개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보다 강화 하고 불법 주정차 증가 원인을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말했다.

앞서광주시는지난달 2021년도 '정 의롭고 따뜻한 광주만들기' 조성을 위 한 4대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2분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오선우 기자

오늘의날씨 광양 21~28 21~27 일출 06:15 일몰 18:40 월출 15:04 월몰 --:--장 성 흑산도 22~25 20~29 구례 20~29 화 순 곡성 영 광 완도 22~26 함 평 강진 🌧 21~26 21~28 무 안 20~27 장흥 21~26 21~27 해남 21~26 진 도 21~27 고흥 21~26 21~28 신 안 보성 20~25 만조 08:13 21:26 만조 03:00 17:09 간조 09:12 23:46 간조 01:21 13:30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압류' 환영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결 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환영 의 입장과 함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 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 금화되면 한일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아직도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 다"며 "떼쓰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 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빈 기자

추석보름달 21일 오후 6시59분 뜬다

올해 추석 연휴 보름달은 21일 오후 6시 59분에 뜬다.

14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21일 오후 6시 59분(서울 기준)이며, 이튿날 오전 1시 1분에 가장 높이 뜬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 '망' (望)이 되는 시기는 추석 당일인 21일 오전 8시 55

분이다. 이때는 달이 뜨기 전이므로 볼 수 없다.

주요 도시별 달 뜨는 시각은 인천 오후 7시, 대전 오후 6시 57분, 대구 오후 6시 52분, 광주 오후 6시 59분, 부산 오후 6시 50분, 울산 오후 6시 49분, 세 종 오후 6시 57분 등이다. /연합뉴스

'노조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집유

노동자 교섭권 침해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 6명 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14일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 대양판지 임직원 6명에게 각각 집 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업본부장 A씨(62)에게는 징역 1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관리팀장 B씨(47)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 팀장 C씨 (5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았다.

장성공장 팀장급 직원 2명과 대리급 직원 1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 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노 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를 악용해 1년 넘게 2 노조의 단체 교섭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 노사 상생 및 신뢰를 위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 다"며 "3 노조 설립 및 개입 행위를 인 정하는 점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현대산업개발 공사장 찾아가 항의 집회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유 가족과 지역 시민단체가 현대산업개발 이 맡은 공사 현장을 찾아가 참사에 대 한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지역 39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이하 대책 위)는 14일 광주 동구 계림2지구 현대 산업개발 재개발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박재만 대책위 상임대표는 "사고 100 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은 버젓이 광주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다"며 "원청 기업의 철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동참사대책위 '진상규명·처벌' 촉구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 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생명 존 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계림2구역 신축 재개발 사업장 인근 주민들도 나와 "먼지와 소 음, 진동 등 2년간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해 민원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묵묵 부답"이라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여 간 지속적인 고통과 피해에 재산상 의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롭다"고 비판했다. 기우식 대책위 대변인 역시 "참사 이

후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처벌이 진행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주민 피 해를 유발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미국으로 도피한 문 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자진 귀국하며 체포된 것을 계기로 재개발 비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전날 열었다.

추석 당일에는 유족 대책위 등이 마 련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현대산업개발 본사 항의 방문 및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통한 원인 규명과 처벌에 힘쓸 계획이다. /김민빈 기자







시 설 관 리 쇼 핑 센 타 딩 아파트경비관리



입 주 청 소 외 벽 청 소 독 왁 스 작 업

